

사회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Social Welfare Delivery and Finance: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점차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어떻게 사회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인지, 이에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의 대응 범위와 규모, 민간의 참여 및 활용, 이를 가능하게 할 전달체계의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범위 등은 보다 비중있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곧 재정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집약된다.

증가한 복지재정이 정책 취지에 따라 국민들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는지,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복지부문의 재정과 제도는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이를 집행할 전달체계인 인력과 시스템의 마련은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수요나 제도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1. 서론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삶의 질, 이와 직결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따라 사회안 전망에 대한 국가의 투자 수준과 사회적 참여가 높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분야(노동, 주택, 보건, 여성 포함)의 예산규모는 81조원(예산 24.9조, 기금 56.1조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3배 이상 높고,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27.8%)이다.

이와 같이 증가한 복지재정이 정책 취지에 따

라 국민들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는지는 이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복지부문의 재정과 제도는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이를 집행할 전달체계인 인력과 시스템은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수요나 제도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점차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어떻게 사회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인지, 이에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의 대응 범위와 규모, 민간의 참여 및 활용, 이를 가능하게 할 전달체계의 문

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범위 등은 보다 비중있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곧 재정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구조를 진단하고 전망하며, 전달체계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미있는 개혁의 계기로 기대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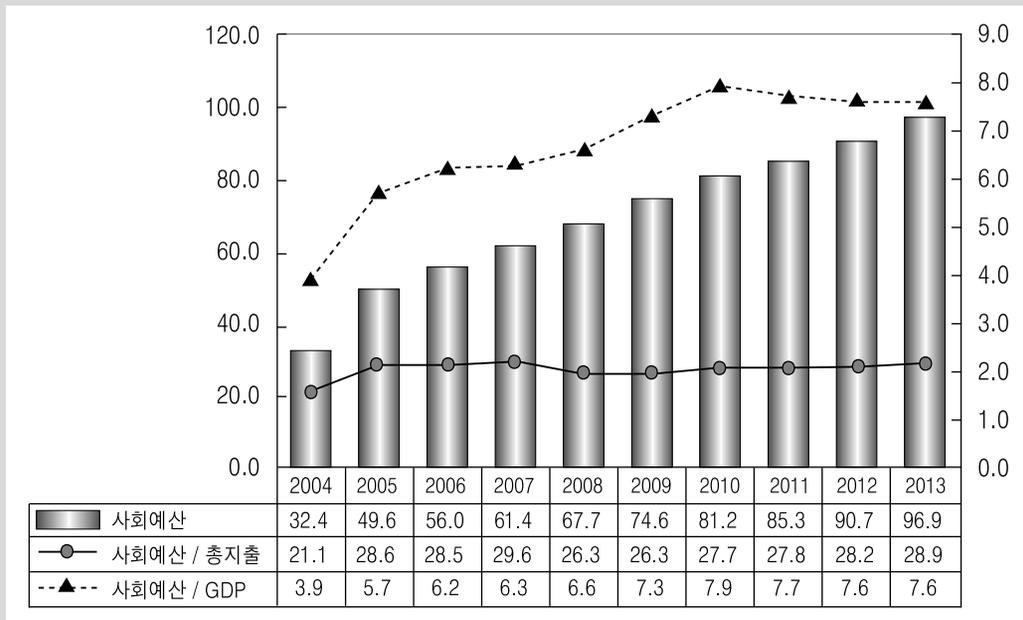
2. 사회복지 재정

1) 복지지출의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¹⁾ 지난 10년간의 복지에산증가율(15.7%)은 일반예산증가율(8.8%)보다 1.78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0년의 경우 복지에산은 역대 정부 자원배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약 81조 2억원 (27.75%)에 이르렀다. 복지지출

그림 1. 복지지출 현황 및 전망

(단위: %, 조원)



주: 2009년-2010년 GDP는 잠정치(한국은행)이며, 2011년-2013년 GDP는 정부의 잠정치(국가재정운용계획)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년도; 대한민국 정부(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1) 여기서 복지지출의 정의는 노동과 주택부문의 지출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기능별 분류상의 정의를 따른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 가족 및 여성지원, 노인복지지원, 청소년복지, 노동부문, 보훈부문, 주택부문, 사회복지일반지원, 보건의료발전부문, 건강보험부문, 식품의약품안전부문의 총 13개 부문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지출을 복지지출로 정의한다.

은 약 89%가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지출이므로, 향후에도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6.8%)은 정부총지출 연평균 증가율(4.2%)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다.

복지재원에서의 비중은 미미하나, 인구고령화의 심화 및 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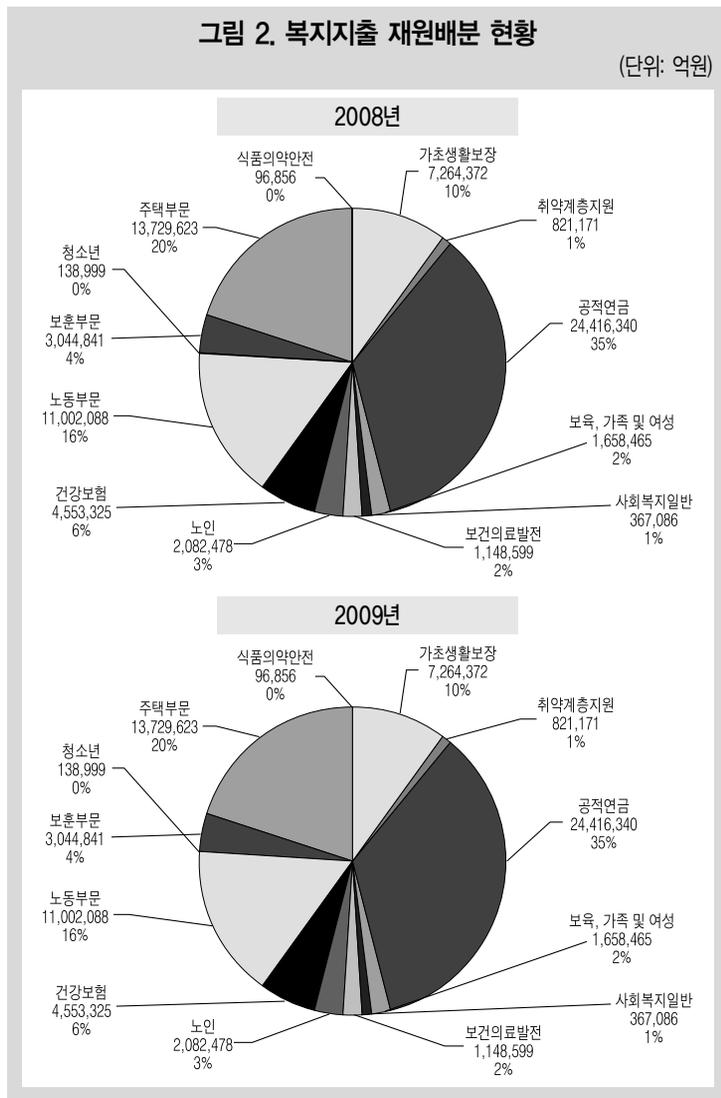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IMF이후 두차례의 경제위기를 맞으며 기초보장제도의 시행, 고용보험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출이 증가하였

2) 복지지출의 구조: 분야별 자원배분

최근의 복지지출의 증가는 무엇보다 사회보험제도의 성숙에 기인한바가 크다. 국민연금급여지출이 본격화되고, 건강보험 급여지원의 증가,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연금은 전체 복지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면에서도 복지지출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제도의 성숙과 인구고령화의 심화가 지속되는 경우 연금급여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등의 신규도입도 현재는 전체

그림 2. 복지지출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지원, 실업급여 지출들의 한시적 증가가 공공부조 제도의 강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공공부조 지출은 소득재분배의 강화, 양극화 해소, 빈곤율의 감소와 더불어 규모면에서 감소하거나 수렴할 수도 있다. 다만, 통일 시나리오 하에서는 급격한 지출의 증가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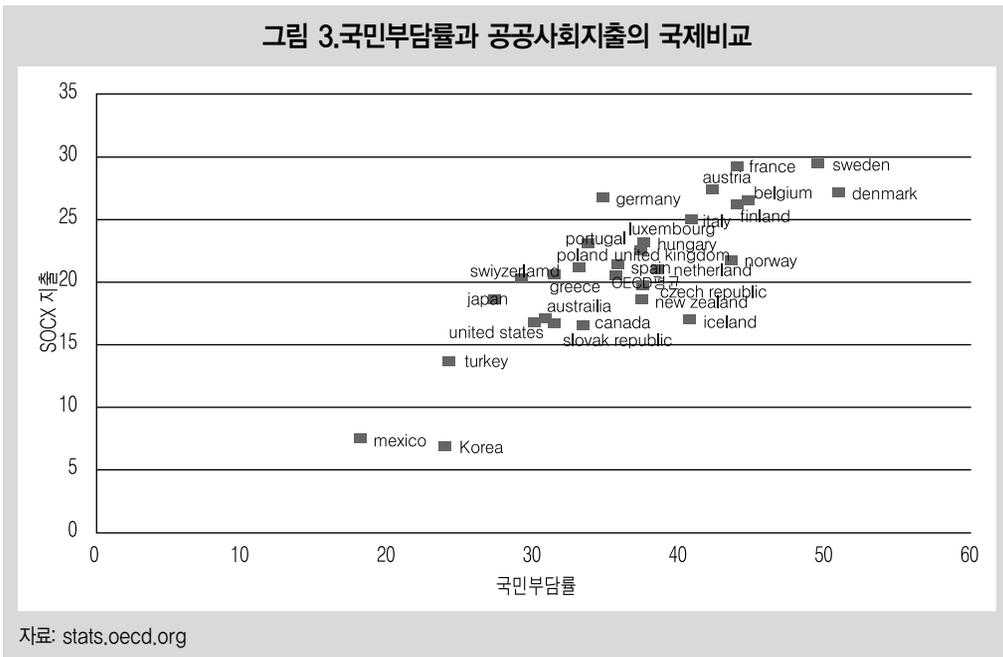
최근의 복지지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육지원의 급격한 증가이다. 보육지원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자도 중산층까지를 포함하는 등 규모면에서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대상자의 확대가 더욱 포괄적인 계층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보육부문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3) 복지지출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2005년 기준 GDP대비 약 6.9%로 OECD평균(20.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분단상황과 급속한 경제발전 등으로 총재정에서 국방 및 경제 분야의 재원비중이 해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이외에도 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연금의 성숙도, 국민소득수준, 국민부담률 수준, 고령화 등 다양하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연금성숙도를 반영하면, 현행보다 약 4%정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윤석명 외, 2006). 둘

그림 3.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의 국제비교



째,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05년 기준 23.9%로 OECD평균 35.7%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005년 기준 약 1만 8천달러로 OECD 평균 일인당 국민소득(약 3만3천달러)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5년 기준 9%로 OECD평균 13.8%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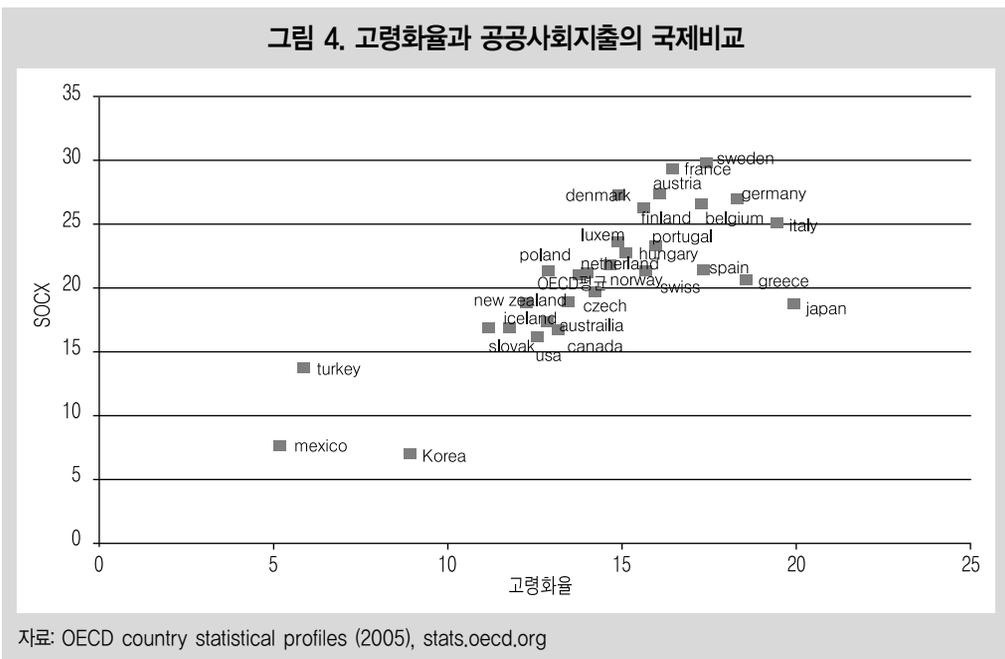
4) 복지재정 운용의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사회보험의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서비스 강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규모의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급속한 고령화속도와 더불어 향후 고령화

관련 지출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복지지출의 대부분이 법정지출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복지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중에 중산층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 지출규모의 지속적 증가는 제한된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떠나, 우리사회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민부담률의 증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부담률의 증가에 앞서 복지재정 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선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복지지출규모면에서의 증가가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빈곤층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우

그림 4. 고령화율과 공공사회지출의 국제비교



리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환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복적인 사업에의 지출, 복지 전달체계상에 있어서의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성과에 연동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사업 성과를 명백히 반영하도록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과 재정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부담의 합리화와 지역간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분권화와 사업공급 및 전달 측면에서의 지자체 분권화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들이 지방이양되었으나, 이를 위한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이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복지지출의 필요성이 큰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간 재정부담의 격차가 발생하고 서비스 배분의 지역 간 격차 발생과 함께 서비스 접근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지출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부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개선, 국고보조금제도, 분권교부세 등 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전달체계 개선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의 배경 및 전달체계 개선 정책

올해부터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이 “행복e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개편되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준비해왔다. 각종 복지제도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원 및 정보시스템을 “행복e음”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신청·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서, 담당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을 줄여,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3월부터 개편을 준비한 바 있다. 정부 5대 국정지표인 ‘섬기는 정부’ 4대 전략, 36개 과제 중 ‘핵심과제’로 포함됨, 이 과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08. 4)하여 관계부처·전문가 협의체계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가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 지자체·유관 공공기관·민간 서비스 공급기관·다양한 잠재적 민간자원이 유기적으로 동원·활용되도록 준비하였으며, 이는

2009년부터 민생안정지원 체계 구축,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009년 초부터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에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6월 12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효율성, 투명성의 제고와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첫째,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복수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둘째, 복지 전달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방지, 셋째,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익을 주는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넷째, 소요 인력은 업무재조정 등을 통해 확보하고 증원은 억제 등의 기본 방향 속에서, 다음의 7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하여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사업별로 관리되는 복지부 소관 119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 부정·중복 수급 방지 효과
- 현금성 복지급여를 1인 1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여, 상시적인 급여내역 모니터링,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을 방지, 수급자의 복지 체감도 제고
- 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

-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조정(지역별 다기능화 및 전문화)과 시설유형 축소 조정을 통해 수요자 불편과 예산운용의 비효율성 해소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 보강(결원 충원, 지자체별 ‘대체인력 pool’을 확대하여 육아·출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 일선 동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에서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정
- 한편,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전략 계획(BPR/ISP) 실시, 기반구축 1차 사업(업무분석, 소득·재산 표준화, 관계기관 정보연계 협의)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는 3월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관리부서를 행정안전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정보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정보연계, 운영기관 설립근거 마련 등, '09.4.30 국회통과, 6.9 공포)하였으며, 기반구축 2차 사업(시스템 설계, 개발, 정보연계, 자료전환,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2010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하였다.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주요 내용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본 개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근거). 이는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정책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기획-관리하고 시스템 운영을 주관한다.

시스템은 다음 그림과 같이 복지급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 복지수급자 개인별·가구별 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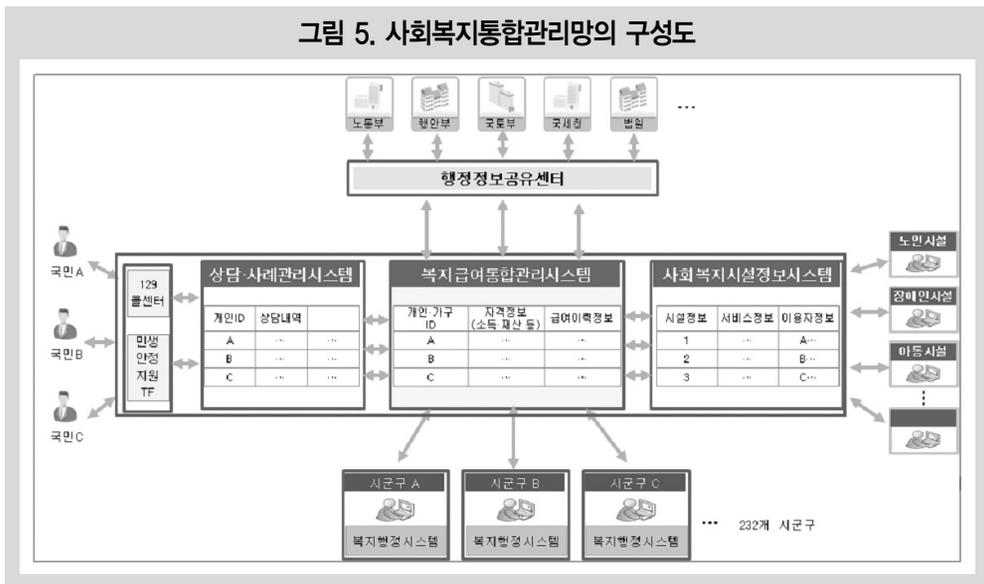
이전과 달리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 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전국,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이전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DB)하게 되고,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여, 부정·중복 지원은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 안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3) 유관기관 공적 자료 연계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와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에 수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재산·인적정보는 18개 기관 49종, 급여·서비스 이력정보는 15개 기관 166종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지자체간의 보조금 청구 등을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시설수급자 등 개인별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4) 복지급여 지급 절차 보완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을 연계하고, 계좌 실명인증을 거쳐 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하여, 복지급여 지급내역의 임의수정을 방지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계좌를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하도록 하였다.



(5)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절차 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계기로, 지자체 사회복지행정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첫째,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37종에서 6종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5개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정기적인 소득·재산 변동의 확인, 급여급자료 생성 등 반복 처리해야하는 업무를 자동화하고,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변동사항 등을 자동 안내하도록 하는 기능이 반영되었다. 수급자 변동(이혼-사망, 군입대, 출입국정보 등)을 매번 조회 요청하지 않아도, 변동이 있을 경우 중앙에서 화면을 통해 자동알림 통보된다.

(6) 상담·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군구·읍면동의 전화, 방문 상담 정보를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콜센터로 접수되는 전화민원의 시군구 이관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한 수요자별 욕구에 적합한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였다.

(7) 지자체 인력 배치 및 업무조정 체계 정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준비하며 정부는 이와 함께 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

체 사회복지 업무 및 인력 재배치를 독려하였다.

첫째, 복지급여대상자 수혜자격 적정 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고,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중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한 상담안내 서비스 실시가 실시되도록 하였다.

넷째,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대효과와 과제

(1) 복지행정 측면

첫째, 급여행정의 정확성-일관성-형평성 제고 및 행정오류의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사업별로 상이했던 소득재산조회 기준을 표준화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이전에는 매번 조사했던 것을, 한번 조사하면 그 자료를 여러 사업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공적자료 연계가 확대되었으며,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선정·급여의 정확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집행과정에서의 급여내역 임의변경 등을 통한 부정 소지가 방지됨에 따라 급여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공적자료 조회기간이 최대 14일에서 약 3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업무자동화 및 편의성 제고의 측면이다. 이는 소득, 재산, 인적정보의 주기적 변동내역이 일괄수집, 제공되는 점, 매월 15일까지의 변동내역을 토대로 급여자료가 자동 생성되는 점, 개인과 가구의 자격정보, 서비스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가능하다는 점,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시설 보고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는 점, 보조금 지원시설의 개인별 서비스 이력을 제공받아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섯째, 이러한 변화들, 즉 급여지급을 위한 행정업무의 양적 부담과 공적자료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른 사회복지행정 업무 담당자의 심적 부담 경감도 예상된다.

(2) 공공정책 관리의 측면

첫째,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담당자의 임의적 수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앙에서 전산 시스템을 기반(cross-check 및 유사패턴 분석)으로 전국의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여 횡령등 부정소지 차단으로 재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통일된 조사기준의 적용, 대상자별 욕구 및 가격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 누락이 방지되면서, 복지지원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활용하여 중앙 정부의 정책 취지와 세부업무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책기획-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

질적인 업무 효율성의 담보가 가능하다. 즉, 정부의 변화하는 정책 정보, 지침 변경, 부정사태 고지 등 신속한 정책 확산 및 중앙과 지자체간의 소통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속적인 데이터의 축적·분석을 통해 신규 복지서비스의 설계, 급여 편중의 조정 등 근거기반의 정책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이용자 및 서비스 측면

첫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집중관리, 사례관리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이용가능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복지급여를 1장의 신청서로 신청하며, 욕구와 자격에 맞는 수급가능한 서비스 안내과정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발급서류 및 신청서식 축소로 민원 편의가 증대되고, 초기상담정보의 담당자간 연계 강화, 대상자책정기간 축소 등의 변화로 서비스의 대응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주요 과제

이와 같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전달체계 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의 선진적인 IT 기반과 축적된 사회복지 현장의 행정서비스 노하우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이후 안정화과정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달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갖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시스템의 안정과 적응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복지행정업무의 운영지원시스템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당초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고도화의 추진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복지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몇 가지 준비해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첫째, 정보연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추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정보화의 파급력을 높여 실질적인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과 제감도 증진에 기여할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원자료를 보유한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주기적인 원자료 업데이트, 정보연계 관련 책임성 강화와 법적 근거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산조사 표준화 및 선정방식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및 재산 항목별 표준화방안 정교화와 함께, 복지정책안 선정방식 및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제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이다.

셋째, 사회통합관리망 구축과 병행된 전달체계 개선 대책의 정착이 필요하다. 업무절차 변

화에 따라 새롭게 설계된 업무분장이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지자체에서 이에 적응하여 업무수행상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교한 점검과 분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급여 행정의 효율화, 보호·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조사에 집중했던 복지전문인력의 업무를 복지 욕구의 파악-지원-지속관리를 위한 서비스 및 자원관리업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적자료 기반의 자산조사체계가 안정화되면, 일반행정직의 자산조사 담당을 대폭 확대(외국의 경우 financial assessor와 social worker의 역할 분리)하는 방안이다.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적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행정직이 실질적인 복지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계기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고용 연계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실업급여 지원, 취업 지원의 통합적 수행체계의 적실성의 검토가 요청된다.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례관리의 체계화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일부 수급자 중심의 사례관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고, 가구별(기초수급), 개인별(노인장기요양, 아동-드림스타트, 장애인사례관리) 분산 운영중인 공공 사례관리 체계의 정비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